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9. 1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마이크로소프트, 해외뇌물 혐의 해결을 위해 2천5백만 달러 지불 ... 1](#)
-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BBVA 부패 혐의 기소 4](#)
- [불가리아 반부패위원장 아파트 매입 스캔들로 사퇴 6](#)
- [부패의 비용 8](#)
- [엘살바도르 반부패위원회 설립 14](#)
- [인도네시아 학생 수천 명, 반부패기구를 제약하는 법안 반대 시위 벌여 ... 16](#)

II 국제회의 동향

- [제29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19](#)
- [제10차 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부패예방그룹 회의 ... 20](#)

III 옴부즈만 소식

- [세계옴부즈만협회 : 신입 사무총장 임명 21](#)
- [아일랜드 : 집 없는 아동 문제 심각 22](#)
- [캐나다 : 부당행위 및 인종차별 혐의의 불충분한 조사에 대한 권고안 ... 24](#)
- [네덜란드 : 네덜란드령 지역의 노인 빈곤 정책에 우선순위 요청 ... 27](#)
- [대만 : 중화민국 감찰원 공공 온라인 정치 후원금 기부 시스템 개통 ... 30](#)
- [영국: 옴부즈만 조사결과 암 치료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31](#)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마이크로소프트, 해외뇌물 혐의 해결을 위해 2천5백만 달러 지불

(The Wall Street Journal, 2019.7.22)

마이크로소프트는 헝가리 등 4개 자회사가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을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천5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해외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2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4개 자회사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각각에 대하여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와 합의했다.
-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원회가 언급한 위법행위를 인정 또는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Brad Smith) 회장은 지난 월요일 임직원에게 발송한 사내 이메일에서 문제의 위법행위에 소수의 임직원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더 이상 회사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 스미스 회장은 이메일에서 '몇 년 전 문제의 사건을 처음 인지했을 때 몹시 실망하고 당황했으며 오늘 합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취해온 모든 조치를 통해 모두가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헝가리 지사가 소프트웨어 사용권 할인을 통해 해외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했으며, 헝가리 지사는 미 법무부와 합의하여 불기소하기로 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가 비자금을 통하여 정부 공직자들에게 불법으로 선물과 여행 혜택 등을 제공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또한 터키에 위치한 자회사는 거래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지나친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를 포함한 미 당국이 뇌물 공여 가능성과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하여 헝가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판매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 총 2천5백만 달러의 벌금에는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영리와 관련 이익의 환수 추정금 1천6백6십만 달러와 헝가리 지사에 대한 벌금 8백7십5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 미 법무부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헝가리 지사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대가로 벌금의 25%를 감면받았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정책 위반을 이유로 헝가리의 라이선싱 협력사 네 곳과의 사업 관계를 종료했으며, 제품 할인과 관련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 헝가리 정부와 의혹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리직에 있었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면서 4선 총리가 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gan) 총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대 초 헝가리와 인접국가에 진출한 이후 선진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2012년 공개회의에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운영책임자 케빈 터너(Kevin Turner)는 오르반 총리와 만찬을 함께하며 헝가리 정부가 경쟁사의 무료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과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설득을 시도했다.

-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그 후 2년간 마이크로소프트는 긴밀한 관계의 헝가리 기술회사들에게 최대 30%의 할인을 제공하면서 연간 대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문제의 판매건 중 얼마나 조사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헝가리 지사 직원 2명은 헝가리 밖 경영진의 강력한 권고로 그러한 높은 할인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들 중 한 명의 증언에 따르면 헝가리 역외 마이크로소프트 판매사원들이 이러한 할인을 승인했다고 한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헝가리 지사의 직원들이 할인 제공 근거를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직원들은 윗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지도 않은 듯 한 문화 속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헝가리 지사의 전 임원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임직원을 탓하는 데에 몹시 실망했다’고 말했다.
- 문제의 거래를 통하여 매출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이 상승했다. 2015년 보도자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헝가리가 ‘동일 규모의 전 세계 지사 중 최근 5년 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년 만에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 원문기사 : Microsoft to Pay \$25 Million to Settle Foreign Bribery Probe (2019.7.22, The Wall Street Journal)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BBVA 부패 혐의 기소 (Deutsche Welle, 2019.7.30)

BBVA는 2004년 은행을 인수하고자 했던 건설회사 임원들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은행의 전·현직 관리자 9명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 스페인 법원은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가 ‘부패와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다. 반부패 전담 검사들은 발표 5일 전 해당 사건을 상급 법원에 이첩했다.
- BBVA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써, 중남미와 미국 남동부에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BBVA의 자회사인 ‘방코머(Bancomer)’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 BBVA는 실각한 전 경찰총장인 호세 마누엘 비야레호와 2004년 계약을 맺고 기자, 정치인, 기업인에 대한 불법 전화 도청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2017년부터 복역 중인 비야레호는 수십 년 간 자신의 기업정보회사 ‘세니트(Cenyt)’를 통하여 기업 또는 재력가의 사주를 받아 협박과 위협, 도청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스페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BBVA는 2004년 비야레호의 회사 세니트를 고용하여 건설회사 ‘사시르(Sacyr)’의 임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는 사시르의 은행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 BBVA는 결국 세니트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카를로스 토레스(Carlos Torres) BBVA 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은행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법을 준수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BBVA의 전·현직 관리자 9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 조사를 받고 있다. BBVA 일부 임원 역시 계약 수주를 대가로 세니트로부터 선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프란시스코 곤잘레스(Francisco Gonzales) BBVA 회장은 조사가 시작된 후 2019년 3월 명예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 원문기사 : Spain's second-largest bank BBVA charged with corruption (2019.7.30, Deutsche Welle)

불가리아 반부패위원장 아파트 매입 스캔들로 사퇴 (REUTERS, 2019.7.31)

불가리아 반부패위원장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고급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는 혐의로 사퇴했다.

- 고급 부동산을 시세 이하로 매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정치인 일부가 사임한 가운데, 불가리아의 반부패위원장 역시 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사임했다.
- 지난 4월, 소티르 차사로프(Sotir Tsatsarov) 불가리아 검사장은 팔멘 게오르기프(Palmen Georgiev) 반부패위원장과 그 부인이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한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대통령은 2018년 3월 취임한 게오르기프 위원장을 해임했다.
- 해당 조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막기 위하여 장기 휴가를 신청한 게오르기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 게오르기프 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 가족에 대하여 심각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가리아의 반부패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게오르기프의 신고 내역과 실제 소유 내역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당국의 설명을 촉구했다.
- 조사관들에 따르면 게오르기프 위원장은 자택 건물에 대한 재산신고서에서 186 제곱미터(2,000 제곱피트) 면적의 테라스를 누락했다.
- 게오르기프의 사임안은 지난 수요일 국회 투표 결과 120:3으로 가결되었다.

- 불가리아 집권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의 츠베탄 츠베타노프 부대표는 이와 비슷한 의혹에 휩싸인 이후 지난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 불가리아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번 스캔들로 인하여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두 명의 차관급 공직자가 동일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시세 이하의 가격으로 소피아시 외곽의 고급 대형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임하게 되었다.
- 스캔들에 연루된 모든 정치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반부패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중 가장 부패한 국가이며, 전문가들은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가 불가리아의 야심찬 해외투자 유치 계획과 EU 생겐조약 가입에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 연이은 정부들이 계속해서 부패 척결을 공약해 왔으나 고위 공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다.

※ 원문기사 : Bulgaria's anti-corruption chief resigns over apartment scandal (2019.7.31, REUTERS)

부패의 비용 (IMF, 2019.9.5)

부패는 공공재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가 왜곡되면서 국가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한다.

- 뇌물은 조세수입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
- 2013년, 브라질 수사당국은 일반적인 돈세탁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영 석유대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연루된 뇌물과 입찰 담합 의혹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후에 ‘세차작전’이라고 알려진 이 수사 결과로 브라질 건설대기업 몇몇이 지난 수년간 페트로브라스의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스캔들에는 정부 공직자와 정치인 수십 명이 연루되었다.
- 이러한 점은 거래는 브라질과 같은 신흥 경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1970년대에도 비슷한 대규모 스캔들이 불거졌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미국 군용기 구매 계약을 승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캔들로 인하여 미국 기업의 해외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부정부패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문제가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부정부패는 그 정도에 따라 공공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가 지나치게 상승하며 공공투자사업에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비용은 단순히 그러한 손실들의 수치상 합계가 아니다. 정부지출 우선순위가 왜곡되면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이 저해된다. 이로 인해 교육과 의료,

효과적인 사회기반시설 등 경제성과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공공 재원을 좀먹게 된다.

국민 신뢰 저하

- 부정부패는 어떻게 국가수입을 제한하는가? 한편으로 부정부패는 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 부패한 입법자들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면세규정을 도입하거나 허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잠재적인 조세수입을 저해할 수 있다.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불투명할수록 공무원들이 행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커지고 유리한 결과를 대가로 뇌물이나 사례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1996년 뉴욕 타임즈는 1996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게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조세법의 왜곡과 조세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세금 납부 의지를 약화시킨다.
-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상당한 재정적 혜택이 따라올 수 있다. IMF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부패 문제가 덜 심각한 나라에서 조세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의 국가들 중 부정부패도가 가장 낮은 국가가 가장 높은 국가보다 GDP의 4% 상당의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진전을 이루어 왔는데, 모든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했을 경우 1조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1.25% 상당의 조세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Hot spots

- 부정부패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천연자원, 특히 석유와 채굴산업 등 몇몇 부문에서는 특히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인다. 공공정책과 법이 국가의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부패관행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천연자원 채굴과 관련된 막대한 이익이 뇌물 공여, 심지어 국가의 독점을 시도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자원부국들은 천연자원을 통하여 축적한 국부의 사용과 관련한 제도와 관련자의 책임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부정부패는 공무원과 선출 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에 취약할 수 있는 국영기업들 사이에 만연하다. 그 결과, 에너지, 공익사업, 교통 등 필수 핵심 부문의 국영기업들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국가는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프랑스 엘프아키텐(민영화 이전), 남아공의 에스콤과 트란스넛 등 이러한 국영기업이 연루된 유명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재원의 남용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국영기업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부정부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사실은 부정부패 문제가 덜 심각한 국가에서 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는 이들 기업 사이의 성과 차이와의 관련성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조달 역시 부정부패가 만연한 부문 중 하나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정부조달은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36개의 경제 강국으로 구성된 OECD 회원국에서는 정부조달이 평균적으로 GDP의 13%를 차지한다. 특히 공공 투자와 관련된 정부조달은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취약한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뇌물로 숨기거나 비용을 부풀리기가 쉽다.
-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은 일반적으로 건설이나 방위산업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교사나 의료인의 임금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 결과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한 국가에서 교육이나 의료에 대한 공공지출은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하고 이러한 부문에서의 근로자 생산성이나 생활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저소득국가 중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곳에서는 교육과 의료 예산 비중이 약 3분의 1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국가에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다른 국가 학생들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받는 수업의 질은 낮다. 이는 단순히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적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공립학교 교사직을 얻으려면 뇌물과 연줄이 필요하다.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의 일종으로 교사의 잦은 결근이 만연한 상황이고, 브라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부패의 영향으로 줄어든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중퇴율이 더 높고 학업성취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의 성공

- 부패의 감소는 힘든 일이지만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온다. 부패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국가들은 조세수입의 증가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 그 예로, 조지아는 2003년 새로운 행정부 출범 당시 심각한 수준이었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강력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세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이 GDP의 12% 수준에서 25%로 증가했다.
- 조지아의 성공은 새로운 납세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탈세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50%에서 80% 가까이 증가하였다.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범죄율과 정전 빈도가 감소하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 것이다. 조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임금과 연금 체불을 청산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향상되었다.

- 그렇다면 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조지아의 사례와 같이 주요 정치적 변화가 엄청난 개혁과 신속한 개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진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청렴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IMF는 많은 국가들을 연구했으며 그 결과 정책입안자들이 참조할만한 특정 사례들을 찾아냈다.
- 상호간에 지원이 가능한 복수의 기관이 부패에 함께 맞설 때 부패를 없애는 데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정부조달이나 세입행정, 천연자원 관리 등 부패 위험도가 높은 부문부터, 효율적인 내부 통제에 우선 초점을 맞춰 반부패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정 관리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부처, 공기업의 장이 가장 위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적인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기술의 진보에 발맞춰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 IMF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투명성이 증가하고, 뇌물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 칠레와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조달 제도가 투명성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투명성과 언론의 자유의 증대는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에서 국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공공 투자사업의 실질적·재정적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증가하면 부패 척결에 있어서 재정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보가 널리 전파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감사결과의 공개가 공금 유용 의혹이 있는 공직자의 재선임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수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각국의 국내 제도 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40개국 이상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돈세탁 수사를 강화하고 금융 제도가 불투명한 외국에 불법자금을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을 억제할 수 있다.
- 부패 척결이 어려운 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부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 정치적인 의지,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국제협력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 원문기사: The Cost Of Corruption (2019.9.5, IMF)

엘살바도르 반부패위원회 설립 (REUTERS, 2019.9.9)

엘살바도르는 부패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미주기구(OEA)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독립기구인 반면책 국제위원회를 설립하였다.

-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웃 과테말라 전 대통령의 사퇴를 촉발한 UN 지원 반부패 기구를 참고하여 부패 근절을 위한 새로운 독립위원회 설립하였다.
- 지난 6월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연루되었던 부패 문제의 해결을 공약했고,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엘살바도르 반면책 국제위원회’ (CICIES)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 엘살바도르 반면책 국제위원회의 명칭은 오토 페레즈(Otto Perez) 전 과테말라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수십 명을 사퇴시켰던 조사기관인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 반면책 국제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미주기구(OAS)와의 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단순한 부패 근절이 아니라 반면책 국제위원회를 통한 부패 척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UN도 부켈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주기구와 함께 엘살바도르 반면책 국제위원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 미주기구의 루이스 포르토(Luis Porto) 기술사절단장은 ‘향후 10년간 민주주의 제도가 강화되어 마침내 엘살바도르 반면책 국제위원회가 필요 없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져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가 불러일으킨 반향이 워낙 컸던 이유로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과테말라 대통령은 자신 역시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이후 반면책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기피대상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의 권한 갱신을 거부했다.
- 결국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는 이번주 초 과테말라를 떠났다.
- 부켈레 대통령은 세금 횡령 환수와 기업의 조세회피 조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재무부 내에 특별부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끊임없는 뇌물 스캔들에 지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반면책 국제위원회 설립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
- 51세의 보안직원인 후안 로페즈는 ‘이들의 조사는 올바른 행위이다. 더 이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좋은 나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 2004~2009년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었던 안토니오 사카는 돈세탁과 횡령죄로 수감 중이다.
- 2009~2014년 재임한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 전 대통령은 3억5천1백만 달러 상당의 돈세탁과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엘살바도르 당국은 2016년부터 니카라과에 거주하며 정치적 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푸네스의 본국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 원문기사 : El Salvador launches anti-corruption commission, inspired by Guatemala (2019.9.9, REUTERS)

인도네시아 학생 수천 명 반부패기구를 제약하는 법안 반대 시위 벌여 (Time, 2019.9.30)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고위층 공직자의 부패, 거액의 뇌물 사건 등 세계를 뒤흔든 대규모 부패 스캔들 25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학생 수 천명이 인도네시아 반부패기구 권한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시위를 재개하면서 경찰과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
-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통제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서는 월요일 임기 종료를 앞둔 하원의원 560명이 마지막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 지난 나흘간의 소강상태를 깨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포함된 시위대 학생들이 돌을 던지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 하자 저녁 무렵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 시위대는 통제된 도로 부근에서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경찰에게 돌과 화염병, 폭죽을 던졌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 이와 비슷한 충돌이 웨스트자바주(州) 반둥시(市), 남부 술라웨시주(州)의 주도 마카사르 등지에서도 발생하면서 지난 금요일 시위에 참여한 학생 한 명이 진압 무기에 부딪혀 중상을 입기도 했다.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자바 지역 솔로시(市)에서도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게 돌을 던지면서 4명 이상의 여경이 머리 부상을 당했다.
- 시위대는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뇌물 문제의 척결을 위한 핵심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시민운동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찰과 의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해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가장 믿을만한 공공기관의 권한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 지난주부터 시위가 격화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파출소를 비롯하여 톨게이트,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화가 발생하고 있다.
- 술라웨시섬 켄다리시(市)에서는 학생 두 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수백에 이른다.
- 시위 참여 학생의 사망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었고, 위도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고 경찰총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 인도네시아가 만연한 뇌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는 반부패를 공약으로 내세워 최근 재선에 성공한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자신에게 밀려 낙선한 군 장성 출신 프라보워 수비안도(Prabowo Subianto)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대를 진압한 바 있으나, 이는 지지 세력이 제한되어 있는 당파 정치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컸다.
- 그러나 이번 시위는 특정 정당이나 집단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역사상 변화의 원동력이었던 학생들이 이끌고 있다. 1998년의 학생 시위로 촉발된 사건들로 인하여 당시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장기 집권했던 독재자 수하르토가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 학생 시위대는 인도네시아의 반부패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KPK)에 대한 신규 입법을 대체할 정부 규정을 반포할 것을 위도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들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빈번히 시도해 왔다.
-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학생들의 시위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시위대에게 공공시설물을 파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위도도 대통령은 또한 ‘인도네시아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공공의 해를 끼치고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학생 시위를 통하여 드러난 국민의 바람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위도도 대통령은 새로운 반부패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반부패기구의 권한 축소를 바라는 여권 연합 소속 의원들은 즉각 이에 반발했다.
- 인도네시아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Indonesia Democratic Party in Struggle) 소속 밤방 우르얀토 의원은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와 연합정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우르얀토 의원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하원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 반부패 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반부패 감시’(Indonesia Corruption Watch)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전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현직 의원 23명의 부정부패 혐의를 폭로한 이후 이들이 의원직 유지를 위하여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수산티씨는 ‘정당들이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의 이익보다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동남아시아의 경제 강국 인도네시아는 201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 지수에서 175개국 중 89위를 차지했다.

※ 원문기사 : Thousands of Indonesian Students Protest Law Restricting Anti-Corruption Agency (2019.9.30, Time)

2 국제회의 동향

1 제29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8.21(수) ~ 8.22(목) /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
- 참석자 : APEC 회원국, OECD, TI 관계자 등 60여명
 - ※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참석

2. 주요 논의내용

-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 13개 회원국(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중국, 한국, 대만, 미국)이 발표
 - ※ 위원회는 한국 대표로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내실화 노력 등 부패방지 전략 소개
- ACTWG의 15주년 기념성명서 합의 및 각료회의 선언문 검토
 - (기념 성명서) 중국 측 주장에 따라 '부패 수익의 회복' 문구에 '베이징 선언과 일치하는(in accordance with the Beijing Declaration)' 내용 추가 후 수정안 최종 합의
 - (각료회의 선언문) ACTWG 15주년 의미·격려 내용 각료회의 선언문에 담기 위한 작업 논의
- 관련 국제포럼의 반부패 활동 보고
 - 미주 비즈니스 대화 실무그룹 회의* 대표단으로서 월마트 임원이 참석, 인·허가 시스템에 있어 디지털 투명성을 담보할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 모든 관련 부서, 절차에 있어 단일 디지털 창구 마련 등
 - ※ America's Business Dialog Working Group

②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0차 부패예방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9. 2(월) ~ 9. 6(금) / 유엔 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
 - IRG 속개회의 : 110개 당사국 및 IACA, Interpol, 국제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50명
 - 부패예방실무그룹 회의 : 102개 당사국 및 바젤거버넌스연구소, Interpol, 국제관세기구, IACA 등 약 450명
- ※ 우리측 : 권익위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대검찰청 등

2. 주요 논의내용

- IRG 속개회의에서는 제2장(부패예방)을 주제로, 사무국이 25개국의 2차 이행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공공부문(7조), 민간부문(12조), 자금세탁방지(14조) 조항에 대한 권고가 다수였으며, 우수사례는 부패예방 정책과 관행(5조), 사회 참여(13조), 공공조달과 공공재정관리(9조)에서 많이 나옴
- 한편, IRG 속개회의와 부패예방실무그룹 회의 간 공동으로 열린 기술지원 패널토론에서 한국대표는 국민권익위가 수행한 부패예방 관련 국제협력 차원의 기술지원 활동을 발표하였고, 여러 나라가 한국의 기술지원 활동에 관심을 표명함
- 제10차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에서는 반부패 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에서 얻은 교훈(제5조)이 논의되었으며, 많은 당사국들이 이러한 전략개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감독과 평가의 측면에서 효과성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옴부즈만 소식

세계옴부즈만협회 : 신임 사무총장 임명 (IOI, 2019.7.3)

2019년 7월 베르너 아몬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은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2019년 7월 1일, 베르너 아몬(Werner Amon)은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으로 취임했고, 세계 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 베르너 아몬 신임 사무총장은 25년 이상 오스트리아 의원직을 수행했으며, 국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민당의 대변인에 있을 당시 워너 아몬 신임 사무총장은 대유럽 정책과 외교 정책, 인권과 개발정책 등의 분야를 담당했다. 2013년부터는 유럽평의회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PACE)의 오스트리아 대표 단장을 역임했고 2018년에는 의회 부의장이 되었다.

- 베르너 아몬 신임 총장은 지난 6년간 헌신적으로 세계옴부즈만협회를 이끌었던 전임 군터 크라우터 사무총장을 뒤이어 협회의 사령탑이 되었다. 크라우터 전임 사무총장은 새로운 교육 방식의 개발과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군터 크라우터 전임 사무총장은 2020년 5월에 개최될 제12차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의 시까지 협회 자문직을 수행하게 된다.

※ 출처: IOI ‘New IOI Secretary General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2019.7.3.)

아일랜드 : 집 없는 아동 문제 심각 (IOI, 2019.7.10)

아일랜드 아동 옴부즈만은 의회에 출석하여 집 없이 지내는 아동들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고, 적절한 환경의 집에서 살 권리는 모든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 아동 옴부즈만 니알 멀둔(Niall Muldoon) 박사가 오늘 아일랜드 의회 아동·청년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동 옴부즈만의 ‘내 집이 최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집 없이 지내는 아동들의 문제가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 니알 멀둔 옴부즈만은 의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지난주에 의회 주택위원회에 출석하여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번 주에는 아동·청년위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집 없이 지내는 아동 문제는 실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3,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긴급 숙박시설이나 긴급 주거시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에서 지내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이들의 발달과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더 이상 집 없는 아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중앙 주택부서나 지방정부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집 없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 ‘오늘 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긴급주거시설에 지내고 있는 아동 상담 보고서인 ‘내 집이 최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시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물었다’.
- ‘아이들은 시설에 지내면서 친구를 사귀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한 환경이 가족관계나 사생활 보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깊이 잠들기가 힘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며 가족과 친구관계에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아이들의 생각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이 없고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긴급주거 시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식적인 평가 필요 ▲집 없는 사람들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가 품질 기준 계획 이행의 촉구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에 대한 논의 진행 등이 있다’.
- ‘집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겪을 존엄성과 자존감 하락, 안녕과 권리의 침해 등 트라우마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 적절한 환경의 집에 살 권리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로 인권의 근간이 되며 아일랜드의 모든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권리이다’.

※ 출처: IRELAND ‘Homelessness is a real children’s issue’ (IOI 홈페이지>News, 2019.7.10.)

캐나다 : 부당행위 및 인종차별 혐의의 불충분한 조사에 대한 권고안 (IOI, 2019.7.19)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토론토 교통위원회에 검표원의 인종차별적 행동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하였고 교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 캐나다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토론토 교통위원회(TTC)의 검표원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철저하거나 투명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 2018년 2월 세인트 클레어웨스트와 바터스트 스트리트의 노면전차에서 검표원과 경찰관이 한 흑인 청년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이후 토론토 시민과 언론, 선출직 공직자와 옴부즈만은 토론토 교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다.
- 토론토시 옴부즈만 수잔 오플러(Susan Opler)는 ‘토론토 교통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토론토 교통위원회가 정당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드러난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토론토 교통위원회는 2018년 7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주 사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검표원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 수잔 오플러 옴부즈만은 토론토 교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폭넓게 검토하고 나서 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문제의 사건이 벌어지는 도중에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와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차 내 CCTV 영상을 보면 청년이 전차에 올라타고 정확히 2초 후에 검표 종이

아니던 검표원 한 명이 그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청년이 전차에 탑승한 이후 오랜 시간동안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에게 말을 붙였다는 해당 검표원의 주장에 대하여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 토론토 옴부즈만의 검토 결과 토론토 교통위원회의 조사에 몇 가지 잘 된 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토론토 교통위원회의 조사는 당시의 주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관성 있게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
 - ▶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검표원이 그러한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했다.
 - ▶ 조사를 위한 분석 일부에 부적절한 증거 기준이 적용되었다.
 - ▶ 토론토 교통위원회의 조직구조로 인하여 검표원 관련 민원에 대한 1차 내부 조사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 토론토 교통위원회의 조사에 있어서 전문가와 증인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모든 관련 증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무의식적인 인종 편견을 증명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문제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론토 옴부즈만은 사건 당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옴부즈만의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옴부즈만의 관련 검토 결과 토론토 교통위원회 조사 방식 개선을 위한 6개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토론토 교통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권고안 6개를 모두 이행하는 데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 ▶ 모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행

- ▶ 내부 조사관의 추가 교육
 - ▶ 진상조사에 있어서 증거에 대해 조사관들이 적용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 전문가 의견의 적절한 독립성과 정확성 확보
- 옴부즈만과의 폭넓은 논의 결과에 따라 토론토 교통위원회의 임원진은 조직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인종차별 방지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검표원의 소속 부서인 교통집행부의 구조와 문화의 중점을 법 집행과 준수로부터 승객 안전과 서비스, 존중, 존엄성으로 개선하는 등 구조적·문화적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토론토 옴부즈만은 ‘토론토 교통위원회는 시민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백만 시민의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 교통위원회가 그러한 노력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선진 교통 시스템을 제공할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출처: CANADA ‘Recommendations on inadequate investigation into alleged misconduct and racial discrimination’ (IOI 홈페이지>News, 2019.7.19.)

네덜란드 : 네덜란드령 지역의 노인 빈곤 정책에 우선순위 요청 (IOI, 2019.9.12)

네덜란드 옴부즈만은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지역에서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행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지역은 빈곤층 노인인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기초생활비조차 없는 빈곤층 노인이 많고, 이들을 위한 시설도 매우 부족하며 노인들은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이는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노인인구 빈곤 관련 문제를 조사한 레이니어 반 주트펜 네덜란드 옴부즈만의 보고서의 결론이다. 네덜란드 국가 옴부즈만은 보네르섬과 신트외스타티위스섬, 사바섬의 옴부즈만도 겸하고 있다.
- 반 주트펜 옴부즈만은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지역에서 많은 노인들이 비인간적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들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이행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빈곤

- 옴부즈만 조사 결과, 기초노령연금만 수령하는 노인은 기초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에서는 유럽 내 네덜란드령 지역에서보다 생활비가 2배 이상 드는 경우가 많은데 노령연금 액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노인인구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특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조차 모르는 노인들이 많다.

시설 부족

-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지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노인들은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교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집 근처 상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점을 방문해서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그래서 식료품비가 더 지출되게 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노인시설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모든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 시설은 많지 않다. 요양 서비스도 쉽게 이용하기 힘들고 재활 시설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통합적인 접근방식 필요

- 반 주트펜 옴부즈만은 ‘이런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 노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거의 제기하지 않는데,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르면,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6월 27일 사회·고용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해결 방안들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옴부즈만이 보기에는 어떤 정부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고, 누가 이 과정을 감독할지도 분명치 않다. 또한, 모든 자료가 의회에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충분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 반 주트펜 옴부즈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 노인 인구의 빈곤 문제 해결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긴급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카리브 해와 유럽지역 양쪽 네덜란드령 지역 정부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카리브해 협의회’ 필요

-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내부무 장관 주재 하에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카리브해 협의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옴부즈만은 9월 11일 보내르섬을 방문하여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들과 보고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를 통하여 정부와 요양시설 간 소통을 시작했고 이것이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 내 요양시설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배경

- 지난 수년간 옴부즈만과 옴부즈만 팀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을 방문하면서 해당 지역 내 드러나지 않은 빈곤 문제를 많이 목격했다. 빈곤은 국가 옴부즈만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며, 기대했던 바와 달리 2010년 이래로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의 노인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이 지역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연구는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 내 빈곤 문제에 대한 장기적 조사의 시작으로, 해당 지역 내 한부모 가정과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2020년 하반기에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지역 내 빈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출처: THE NETHERLANDS ‘Ombudsman requests poverty policy for elderly in the Caribbean Netherlands to be a priority’ (IOI 홈페이지>News, 2019.9.12.)

대만 : 중화민국 감찰원 공공 온라인 정치 후원금 기부 시스템 개통 (IOI, 2019.9.20)
 대만 감찰원은 정치후원금법 개정에 따라 정치 후원금 기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통했다.

- 2018년 정치후원금법 개정에 따라 중화민국 감찰원은 정치 후원금 기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제 국민들은 감찰원에 직접 문의할 필요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당과 단체, 후보자들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선샤인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정치 후원금과 관련된 공공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시스템은 2019년 8월 14일 공식 개설되었고, 여기에 공개된 최초 자료는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 회계보고서이다. 총 2,241개의 보고서에는 특별시장직 출마자 23명과 군수 및 시장 출마자 51명, 특별시 시의원 출마자 688명, 군의회 및 시의회 의원 출마자 676명의 회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016년 실시된 9대 입법원(국회) 선거의 후보자 보고서와 2018년 정당 및 단체의 연간 보고서는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해당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거나 ‘선샤인법’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다.
- 이용자들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특정 정당과 단체, 후보자, 후원자, 지출목록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선거 별로 검색하거나 각 선거구 및 특정 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의 파일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비교 연구 및 분석에 이용할 수도 있다.

※ 출처: TAIWAN ‘Control Yuan launches public online system of political donation’ (IOI 홈페이지>News, 2019.9.20.)

영국: 옴부즈만 조사결과 암 치료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IOI, 2019.9.27)
 영국 의회.보건 옴부즈만은 수술 지연으로 암환자가 사망한 병원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암 수술을 늦게 받은 한 남성 환자의 사망에 대하여 영국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UK 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 PHSO)의 조사 결과 워링턴·할튼 병원의 국민의료 신탁재단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워링턴에 거주하는 62세 남성 데니스 해리슨 씨는 방광암을 진단받은 이후 수술을 받기까지 6개월을 기다렸다. 해리슨 씨는 암의 급격한 진행이 의심되어 2016년 10월 신탁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영국 국민의료 지침에 따라 신탁재단은 2017년 2월 11일 이내에 해리슨 씨의 암을 치료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7년 4월 25일이 될 때까지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때에는 이미 암이 치료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된 이후였다.
- 2017년 3월 해리슨 씨가 다리 부종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이미 암이 퍼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재단은 그러한 징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해리슨 씨가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암이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로 진행된 후였다. 안타깝게도 해리슨 씨는 2017년 8월 24일 사망했다.
- 해리슨 씨의 부인이 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옴부즈만은 해당 민원을 조사했다. 옴부즈만은 해리슨 씨의 치료가 지연됨에 따라 암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단은 더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 처치를 했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더 빨리 수술을 받았더라도 해리슨 씨가 생존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의 치료 지연과 생존율 하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 의회·의료서비스 옴부즈만 롭 베렌스(Rob Behr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결함으로 인하여 해리슨 씨 부인은 신속한 치료를 통한 남편의 생존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 ‘신탁재단은 해리슨 씨의 암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료 지침에 따라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신탁재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 이에 대하여 해리슨 씨의 부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남편의 진단 외에도, 신탁재단의 수술 일정 조율이 지연되는 사람에 남편과 나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남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했다. 신탁재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는 신탁재단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권고안에 대하여 신탁재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동의했고, 계획에는 향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 워싱턴·할튼 국민의료 신탁재단의 수간호사 킴벌리 새몬 제이미슨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 ‘우리 신탁재단은 해리슨 씨 가족이 부실한 치료를 받는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며, 옴부즈만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바이다.’

- ‘신탁재단은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해리슨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를 취했다. 재단은 우리의 서비스를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지가 있고, 해리슨 씨 가족의 슬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또한,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계획이 옴부즈만의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료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에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출처: UK ‘Cancer treatment delays unacceptable, says Ombudsman’ (ICI 홈페이지>News, 2019.9.27.)